Environmental

2024 ESG Trend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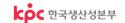
제공일시 2024 01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Social

Governance



2024 ESG Trend 10



제공일시 2023 12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1. ESG 공시

"미국, 중국 제외 주요국 ISSB 공시 도입, 미국과 유럽 Scope3 포함 환경정보공개 기준 완화 움직임… 공급망 실사, 삼림벌채규정 등 S지표 강화"

작년 6월, ISSB S1(지속가능성 공시 일반 요구사항)과 S2(기후변화 공시 요구사항)을 발표, 2025년 첫 공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작년 7월 TCFD와 ISSB가 통합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에 대한 글로벌 통합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ISSB표준에 기반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2024년 상반기에 ISSB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정보공개 표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호주 또한 2024년 7월까지 대기업을 위한 ISSB 기반 보고 프레임워크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에는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ISSB에 기반한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표준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아직까지 ISSB에 연계한 정보공개 프레임워크 수립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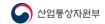
MSCI는 ISSB 표준 제정을 통해 피투자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정보공개의 일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기업간 지속가능성 성과 비교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Australia Brazil 0 *** Canada • • • • China O **European Union 2023** Japan **## 2025** *** Hong Kong *** India **2023 New Zealand** *** ... Nigeria **2025** Singapore 200 ••0 Switzerland South Africa *** Taiwan **第篇篇** 2027 *** **United Kingdom** ... **United States** Yes, industry participation Non-listed companies No formal Yes, but equiator led To become mandatory Listed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s

Exhibit 9: The ISSB's disclosure standards are being adopted at different speeds around the world

Data as of October 2023. Source: MSCI ESG Research

(그림) 국가별 ISSB표준 도입 전망/MSCI







유럽에서는 2024 회계연도부터 EU 소재 기업뿐 아니라 EU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까지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CSRD(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의 도입을 확정, 5만여 개의 기업이 ESG 공시 대상이 된다. 한국 증시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이 EU에 자회사를 두고 있어 CSRD는 국내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다. EU 기업들은 CSRD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EU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의 엄격한 기준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EU집행위원회 측이 CSRD의 보고기준인 ESRS의 공시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초안에서는 스코프 3(Scope 3·공급망 간접배출)가 포함되었으나, 지난 7월 31일 EU 집행위는 기업 중대성(materiality) 평가를 통해 공시표준을 차등적용하는 완화안을 채택했다. 해당 접근 방식에 따르면 기업이 중대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스코프 3 배출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다. 또한 ESRS는 기업의 공시의무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석유 및 가스·자동차 등 각 산업별 공시 세트와 비EU기업에 대한 ESRS 채택 날짜를 2024년 6월에서 26년 6월로 2년 가량 연기했다.

CSRD의 도입은 순차적으로 확대되는데, 2025 회계연도부터는 총 자산 2000만 유로, 총 매출 4000만 유로, 연간 평균 직원수 250명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CSRD를 도입해야 한다. 2026년부터 상장된 중견중소기업, 신용평가기관, 보험사등도 CSRD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국도 상황이 비슷하다. 미(美)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지난 2022년초부터 기후공시의무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스코프 3 배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2023년이 마무리됐고, 미국 내 안티ESG에 대한 정치적 움직임이 커지면서 스코프 3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는 모양새다. 미 SEC는 "스코프 3 배출 공시는 기업 입장에서 너무나 큰 부담"이라는 의견을 수용해 공시의무를 제외하거나 규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SEC의 기후공시의무화 법에 대한 최종안은 2024년 상반기에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미 SEC가 기후공시 의무화 법안 확정을 늦추는 사이, 미 캘리포니아는 매출액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대해 오는 2026년 까지 스코프1과 스코프2 배출량을 공개, 2027년부터 스코프3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요약하면, ESG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스코프3에 대한 기준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다. ESRS는 이미 스코프 3 배출에 대한 기준 완화를 선언했고, SEC의 경우 아직 공시의무화법의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스코프 3 배출이 공시범위에서 제외되거나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ISSB의 경우, 스코프 3 배출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했으나, 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전환 적용 그룹 (Transition Implementation Group)을 설치하고 스코프 3 배출 측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해관계자, 특히 금융계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삼림벌채규정, 공급망 실사지침,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의 사회적지표 추가 등

반면, 사회(S) 분야에 대한 공시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EU의 삼림벌채규정(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이 2023년 12월 6일(현지시각) EU 이사회 및 EU의회를 공식 통과했다.

이 규정은 삼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 팜유, 고무 등 관련 제품의 유럽연합 역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등 총 7개 농산품이며, 이를 통해 생산된 초콜릿, 가구, 인쇄 종이 제품, 숯 등과 같은 파생 제품도 포함된다. 관련 기업들은 대상 제품이 산림벌채 지역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 원산지 국가 및 지리 정보, 인권 및 생산지 주민 권리 보호 여부, 부패방지법 등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실사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MSCI는 "EU 삼림벌채규정 및 공급망 실사지침은 상품 추적이 어렵다고 해서 무시하던 시대가 빠르게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2024년은 어떤 회사가 이 새로운 규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각 상품의 성분 출처를 제대로 보고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MSCI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대두에 의존하는 식품 회사 중 11%, 코코아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 중 8%만이 '공급망 추적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MSCI는 "작물에 대한 위성 모니터링, 가축에 대한 전자 태그 지정, 곡물에 대한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솔루션이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지난 4월, 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공급망 인권관리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의 핵으로 떠올랐다.

MSCI에 따르면, 2023년 11개월 동안 강제 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 국경에서 중단된 상품의 가치는 전년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6월 1일 유럽 의회에서 CSDDD가 채택되었지만, 현재 공식 채택을 위해 의회 및 이사회 등 기관 간 협상을 진행중인데 워낙 첨예한 이슈인지라 2024년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CSDDD에 따라 실사가 의무화될 경우, 현재까지 나온 안에 따르면, 매출의 5%까지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hibit 8: Modern-slavery-related regulations and reporting requirements

Requirements of legislation						
	Public statement Requirement for a public anti-slavery or modern-slavery report with no mandatory content?	Risk assessment Requirement for assessing risk exposure to modern slavery in supply chains?	Risk disclosure Required to publicly report on this risk exposure?	Compliance reporting Requirement for compliance disclosure in public modern-slavery reports?	Due diligence Companies must commit to ongoing monitoring of risks, tracking of mitigation actions and to report ongoing progress	% Exposed % MSCI ACWI Index by market capitalization
US* (Calif.)	Yes					62.8%
UK	Yes					3.7%
Switzerland	Yes	Yes	Yes			2.4%
Canada	Yes	Yes	Yes			2.8%
Norway	Yes	Yes	Yes	Yes		0.2%
Australia (Feder	al) Yes	Yes	Yes	Yes		1.7%
France	Yes	Yes	Yes	Yes	Yes	2.9%
Netherlands	Yes	Yes	Yes	Yes	Yes	1.0%
Germany	Yes	Yes	Yes	Yes	Yes	2.0%
EU**	Yes	Yes	Yes	Yes	Yes	12.1%

^{*}U.S. legislation referred to here applies to companies doing business in California, while exposure number refers to total U.S. **Final wording of EU CSDDD still to be confirmed and formal adoption is not expected until sometime in 2024. Data as of Oct. 6, 2023. Source: MSCI ESG Research

(그림)각 나라별 현대판 노예제 관련 규제 및 공시 의무 사항/ MSCI

이뿐 아니라, EU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DFR)을 보완하는 기술적 세부규칙(RTS)에 사회적 지표를 신규추가했다. 직원 500명 이상인 금융기관은 매년 '주요한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 PAI)'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항목에 사회적 지표가 추가된 것이다. 여기에는 노조 결성,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 소비자 고충 및 불만처리 메커니즘 등이 포함된다.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지표는 ▲담배 및 살상무기 등의 제조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 ▲직원들에 적정 생활임 금 지급 여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준수 여부 ▲남녀 직원의 임금격차 등이다. ILO 핵심협약에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돼 있다.

한편, 미국 SEC의 투자자문위원회도 인적자본 공시규칙 강화를 권고하며 공시분야의 사회적 규제 강화를 암시했다.

이렇게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글로벌 이해관계자의 움직임 때문이다. 환경 분야의 경우 그린래시(친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심화되고, 기업 또한 강화된 환경 규제 움직임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 분야의 경우 전미자동차노조의 파업, 현대차도 연루된 바 있는 미국 협력사 아동노동 스캔들,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이슈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관심도가 높아져, 자연스레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202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할 부문은 TISFD(Taskforce on Inequality and Social-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움직임이다.

지난 4월, TSFD(Taskforce on Social-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와 TIFD(The Taskforce on Inequality-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가 TISFD의 단일이니셔티브로 합병됐고, 2024년 상반기에 공식 론칭되어 투자계의 사회(S)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TISFD측은 기업과 금융계의 사회(S)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된 사회적 리스크 관리 지표를 공개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TCFD가 발족된 후, 해당 기준이 기업 ESG공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것 고려할 때, TISFD 또한 산업계의 공시 트렌드에 큰 파급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